

한국당 뺀 4당,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공조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3야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안' 최종안 준비 한국당, 위헌 가능성 제기 반발...3월국회 벌써 급랭

정지권이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1일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를 분명히 하며 패스트트랙에 올릴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4당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

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 모여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최종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

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4당의 인식이다. 다만,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개수와 대상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건의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야3당 지도부는 이날 조찬 회동을 하고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민주당안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가급적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선거제도 개편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야3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0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지권이 패스트트랙을 놓고 충돌하면서 겨우 문을 연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중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등은 여당과 야3당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국가정보원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 저감 법안 심사 속도

여야 3당, 13일 본회의서 7개 법안 처리키로

국회가 11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렸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를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날 교육위와 환경노동위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심의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 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

다. 이 개정안은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위행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노동위도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 법안을 심의했다. 환경노동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심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위원 3분의 2 선임시 5·18 조사위 가동”

김관영, 진상조사위 구성요건 완화법 발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총원 9명으로 구성

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구성조건 일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지지율 30%대 회복

리얼미터 조사...문대통령 지지율·민주당 소폭 하락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6%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차(31.5%)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린 37.2%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7.0%로 한 주 만에 바른미래당을 다시 앞섰고, 바른미래당은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6.2%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2주 연속 하락한 2.1%였다. 창당 이후 최저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떨어진 46.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2.4%포인트 오른 46.8%로, 지난 1월 첫째 주(긍정 46.4% vs 부정 48.2%) 이후 약 2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노동 유연·안정성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 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동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체계 손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

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SK하이닉스 사례를 들며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나 실적 변동에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성과 공정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며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했고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

스'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공장 확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허용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고,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돌보지 않아도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